

김정렬 차관 “인정적 버스 운행 위해 지자체의 적극 대처” 당부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9일(목)에 전국 17개 시·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, 오는 5월 15일로 예고되어 있는 노선버스 파업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다.
 - 지난 4월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 245개 노선버스 노조는 일제히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, 파업찬반 투표 등을 거쳐 오는 5월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 중이다.
- 김 차관은 “노선버스는 하루 1천 7백만 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, 버스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, 각 지자체의 책임하에 노·사 협상을 적극 중재·조정하여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”고 강조하였다.
 - 각 지자체는 5월 8일 부산·울산·충북에서 진행된 찬반투표의 결과 등 현재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, 파업 발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입장 및 파업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 등이 논의되었다.
 - 김 차관은 지자체의 설명내용 및 파업 대응계획 등을 경청하고,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“근로시간 단축은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긴요한 사항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, 파업 등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 - 또한, “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처하고,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”라고 말하였다.
- 김 차관은 “17개 지자체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노선버스 운행 차질 및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2019. 5. 9

국토교통부 대변인